

FOCUS

- ‘서울을 영화도시로’ ... 총무로에 영화 메카 세운다

ZOOM-IN

- 서울시,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
- 서울시, 기업성장·도시문제 해결 지원 ‘서울형 R&D사업’ 추진

HOT ISSUE

- 서울시,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
- 서울시,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‘고용보조금’ 지원
- 서울시-전라남도,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

김가영(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@seoul.go.kr)

| ‘서울을 영화도시로’ ... 충무로에 영화메카 세운다

서울이 영화 찍기 좋고, 영화도 많이 만드는 아시아 대표 ‘영화도시’ 로 거듭난다.

박원순 시장은 3월 25일 종로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에서 서울 영화 문화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“충무로에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설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영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, 창작의 기반이 되는 영화인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밝혔다.

• 시네마테크 건립해 독립영화 제작·창작자 집중 지원,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소통

먼저 한국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충무로에 ‘파리의 프랑세즈’, ‘뉴욕의 필름 포럼’, ‘타이베이의 필름 하우스’ 를 뛰어넘는 복합 영상문화 공간 <서울 시네마테크> 를 건립한다. 이와 함께 약 7천㎡ 규모의 영화제작 전문 ‘실내스튜디오’ 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‘도심형세트장’ 도 조성해 서울을 명실상부한 한류콘텐츠 핵심기지로 구축한다.

또 상영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독립·예술영화의 제작부터 마케팅, 상영배급에 이르는 윈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상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.

더불어 국내·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해 ‘서울 로케이션시스템’ 을 구축하고, 영화창작 주체인 감독·PD·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 중심의 지원을 펼친다. 경쟁력 있는 중·저예산 및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‘영화전문펀드’ 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.

마지막으로 ‘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’, ‘지역미디어센터 조성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.

한편 이날 발표에는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박찬욱 감독, 영화배우 강수연, 이제훈 씨 등이 참석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영화 친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.



| 서울시,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

서울시내 편의점, 커피전문점,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‘근로계약서’ 를 작성하였으며, PC방·미용실·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근로자 96%는 최저임금('14년 기준 5,210원) 이상을 받고 있었지만, 미용실과 편의점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외에도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‘주휴수당’ 과 ‘퇴직금’ 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, 일한지 1년 미만이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, 휴게시간(13%), 초과근무수당(12%), 임금지급원칙(6%)에 대해서도 일부 근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• 커피점, 미용실,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,697명 대상 기본적인 근로인식 조사

서울시는 3월, 7개 업종(▲커피전문점 ▲미용실 ▲편의점 ▲패스트푸드점 ▲PC방 ▲제과점 ▲화장품판매점)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,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.

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(▲주휴수당 ▲초과근무수당 ▲휴게시간 ▲연차휴가 ▲임금지급원칙 ▲퇴직금)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.

서울시는 “이번 조사 결과, 주휴수당·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” 며 “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아르바이트생·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함으로써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

노동정책과

| 서울시, 기업성장 · 도시문제 해결 지원 ‘서울형 R&D사업’ 추진

서울시가 기술경쟁력 향상,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, R&D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구현을 앞당기는 「2015년 서울형 R&D사업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‘서울형 R&D 지원사업’은 2005년부터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서울소재 대학연구소·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 R&D의 대표모델이다.

• 중소기업 성장, 특화산업 육성, 도시문제 해결형 R&D로 행복한 도시구현이 목표

이번 지원사업에는 ▲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(82억 원) ▲공공 R&D지원 자금(59억 원)으로 총 141억 원이 투입된다.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탐색 및 접목을 위한 ‘R&D 제품기획 지원사업’을 처음으로 도입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. 또 기술개발과 R&D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‘이전기술 사업화’, ‘중소기업 제품 상용화’, ‘특허기술 상품화 및 기술개발’ 등 중소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.

• 안전, 복지,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법 찾아 市 정책으로 성과확산

자체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귀금속, 인쇄, 수제화 등 서울소재 도시형특화산업군의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향후 서울시 정책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.

특히 올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산업군별로 필요한 공동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는 등 R&D 동향 및 기술공급·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.

서울시는 서울형 R&D지원이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연구소 중심에서 기술수요자인 기업, 더 나아가 기술수혜자인 지역사회와 시민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,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, R&D를 통해 서울을 바꾸고 시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경제정책과

| 서울시,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

서울시가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해,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한다.

• 26일(목) 청년창업플러스센터 「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」 개최

서울시는 3월 26일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(구 용산청사)에서 「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(데모데이)」를 개최한다.

‘창업기업-투자자 만남의 장’으로 꾸며진 이번 설명회는 참가 기업이 투자자와 청중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 투자자가 현장에서 바로 투자의사를 밝히고, 이후 절차를 거쳐 실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.

기업명	사업아이템 및 기업실적
(주)해보라	외부소음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통화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어셋 개발
(주)게임베리	글로벌 마케팅 검색 구매엔진(‘정글’) 개발
(주)그린라이트파트너스	위치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글로벌 소셜그룹 앱 개발
선의의 경쟁	중고 휴대폰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
놀라디자인	일상 생활에서 태양광 충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고효율 태양광 충전기



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 입주권(1년)과 1천만원의 창업자금, 컨설팅을 비롯해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와 실제적인 투자연계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.

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서울시는 ▲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▲노스마운틴 ▲오픈트레이드 ▲브라더스엔젤클럽 등 민간투자사 4곳과 「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(MOU)」를 체결하고 ‘창업하기 좋은 도시, 서울’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. 또 청년창업플러스센터 1~2층에 투자자를 위한 사무공간, 특화보육실, 컨설팅룸, 개방형 협업공간으로 조성되는 「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」의 개관을 알리는 현판식도 진행했다.



창업지원과

| 서울시,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‘고용보조금’ 지원

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외투기업)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. 이 사업은 외투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.

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개 외투기업의 신규고용 1,545명에 대해 35억 27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11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3개사가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.

• 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 '14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

보조금 신청조건은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(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)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하고,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한다.

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▲IT융합 ▲디지털콘텐츠산업 ▲녹색산업 ▲비즈니스서비스업 ▲패션·디자인 ▲금융업 ▲관광컨벤션업 ▲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.

•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, 최대 6개월, 기업당 최대 2억 원

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,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.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력협회·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

서울시는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,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투자유치과

| 서울시-전라남도,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

장흥 표고버섯, 완도 김, 영광 굴비, 나주 배 등 전라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이제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서울과 전남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호 방문 및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경험도 공유한다.

서울시와 전라남도, 서울상인연합회와 전남상인연합회는 3월 22일 양천구 목3동 전통시장에서 「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-전라남도 상생발전 협약식」을 개최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.

• 농수산물 우선구매 · 전통시장 지속공급, 우수농수산물 생산지 상호 방문 등



이번 협약은 ▲서울시 ‘전통시장 가는 날’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 전남 농수산물 우선구매 ▲전남 농수산물 서울지역 전통시장 지속공급 ▲우수 농수산물 생산지 및 전통시장 상호방문 및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더불어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

해 도농 간 및 양 지역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.

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,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장,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.

박원순 시장은 협약식에서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지역의 더 많은 우수 특화상품이 서울 전통시장에 보급돼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
소상공인지원과